

파주를 채록하다-김선희

- 사할린 동포의 고향을 생각하며

1989년에는 3만 5,191명의 한인이 거주 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사할린 전체 인구(70만 명)의 5%에 해당하였다. 2002년 러 시아 비공식 인구조사에 따르면 3만 378명이 거주

했고, 2005년에는 한인 1세 인구만 3천 547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1992년부터 추진된 영주귀국사업으로 2007년까지 2,221명의 한인 1세가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였다.

2008년 '지구촌 동포연대'가 조사한 사할린 한인 규모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1만 6천 명, 흠스크에 3천 100명, 코르사코프에 2천 700명, 뽀로나이스크에 2천 500명 등으로 전체 2만 8,260명이 거주하고 있다.

1938년부터 강제로 사할린에 이주된 대부분의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은 사망하였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 두 차례에 걸쳐 영주귀국이 있었으나 그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한인의 귀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로 실행하고 있다.

사할린 동포 귀국 현황은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노동자 등으로 이주 했다가 2차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국적 박탈 조치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머물게 된 이들이다. 당시 약 4만 3,000여 명이 사할린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잔류했다고 알려져 있다.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사업은 1994년 한-일 정부 간 합의로 시작돼 양국 적십자 간 협정 등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되다가 2016년부터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난 30여 년 동안 4,408명이 이미 영주귀국을 한 상태다.

파주시에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4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1940년대 전후로 출생한 고령층이다. 파주에 거주하는 곳은 문산읍 당동리와 선유 3단지이다.

사할린 동포들은 일본 식민지 시절 강제 동원되어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재 사할린 동포들의 상당수가 고령에 접어들고 있으며,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이 된 사할린 동포를 위해 정부는 복지 향상과 정착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할린 동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